

회의자료 94-03

사회복지정책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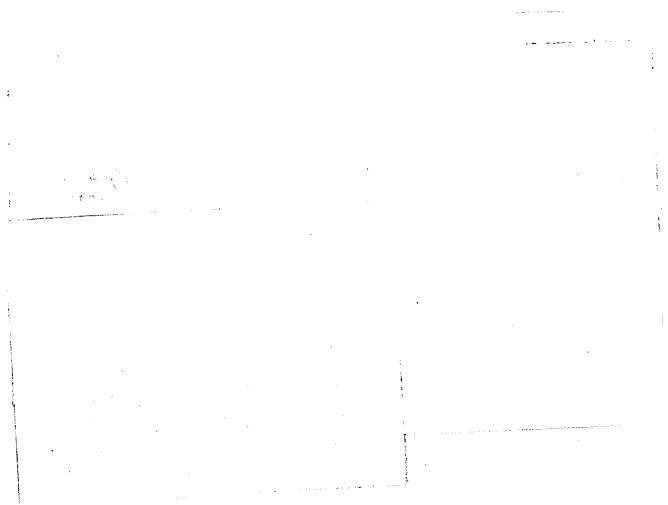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1994. 5.

이 가 옥



일시: 1994. 5. 12.(목) 13:30 - 18:0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

참석자 명단: 장인협(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성재(서울대 교수)

이가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강환(동아일보 논설위원)

오익환(경향신문 논설위원)

김만두(강남대 교수)

박순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박동은(UNICEF 사무총장)

조기동(한국노인복지회 회장)

전봉윤(삼육재활센터)

송경용(나눔의 집 신부)

윤석인(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부장)

정의규(한국경제인연합회 회원부장)

홍성진(한국노동자 총연맹 연구위원)

정무권(경제정의실천연합회 정책연구위원)

경제기획원 보사예산담당관

정무제2장관실 제3조정관

내무부 지방기획과장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외 50명

토의내용: 별첨 참조

#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 토론요지

### I. 사회복지정책방향

- 본 보고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기업체 등 공급주체별로 몇년까지 어떻게 사회복지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음. 이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지가 불분명함.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과 전달체계인데, 이 보고서에는 인력 확보방안 및 배치계획이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을 지역화, 정상화, 민간화의 3가지로 제시했으나, 지역화는 분권화와 지역화로, 정상화는 가족과 지역의 복지기능 강화와 정상화로, 민간화는 민간이나 시민의 참여 혹은 다원화로 재구성 내지 세분화하는 것이 좋겠고, 일본의 경우에는 보편화, 전문직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김만두).
- 본 보고서는 이제까지의 보사정책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현상에 대한 대중적인 대안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송경용).
- 사회보험에 비해 공적부조, 복지서비스 부분은 더욱 낙후되어 있음. 2000년대를 향한 복지체제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틀을 잘 만들어야 함. 그러나 이 발전방향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은 여전히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선성장 후분배 강조,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경향 강함.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에 의존해야 함. 저소득층의 복지는 국가가, 중산층의 복지는 민간이 담당하는 이중체제는 국민을 계층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공적부조 중심의 복지 전개를 통해 복지재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을 낮아졌던 미국의 경험을 참고해야 함.

한국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 조달이 희망적일 것이라고 볼 때, 보편성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정무권, 경실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문제가 고려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촉진법 등과의 연계도 고려될 필요있음.

노인, 장애인복지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홍성진, 노총).

-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정책 방향으로서는 매우 미흡, 현재의 것을 약간씩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예산투자계획도 매우 미흡. 전반적으로 가족, 지역사회의 개입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함. 민간부문의 강조도 시기상조임. 2000년대 방향, 수요, 문제점, 강화되어야 할 것과 유지되어야 할 것을 정리해야 함(박정은).

## II.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

### 1. 공공복지전달체계

-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모델이 더 바람직할 것.  
그러나 보건복지사무소 모델은 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복지와 보건의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오익환, 조강환).
- 노인, 장애인, 아동별 상담소나 시설이 아닌 종합적 전달체계 필요함(박정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여되어 있음. 시설중심 복지에서 재가복지로 전환할 때 현존 700개 시설자원을 재가복지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현재의 시설입소 자격기준을 재검토해서, 시설을 개방하는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함.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사이의 대상자를 위한 시설이 미흡한데서 오는 가족의 유기 유도가 심각, 제도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임(김만두).

## 2.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육성 및 전달체계 확립

-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므로, 복지비를 확보하되 민간의 모금방법을 개발하고, 기업을 사회복지법인화하며, 종교재단의 돈을 사회복지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함(조강환).
- 사회복지에는 1차적으로 정부가, 2차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세법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업이 공공사업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일부만 손비처리되는 것을 공익사업 기부금의 전액면세로 전환해야 함(정의규, 전경련).
- 공동모금은 책임있는 민간단체가 맡아야 하고, 정부는 적립금을 새로운 기구에게 이관해야 함.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공동모금회의 명예총재를 맡는 등 공동모금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음(정의규, 전경련).
- 공동모금은 민간주도의 독립적 운영이 기본원리에도 맞고, 사회복지협회의 인력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도 타당함(조홍식).
- 사회복지협회의 지방협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법정 법인인지, 사회복지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법인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김만두).
- 지방 사회복지협의회 인원은 현재 4명으로서 이러한 인원으로는 1차적 서비스에 치중할 수 밖에 없고, 지역복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힘들(대전사회복지협의회).
-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고교내신성적에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함(조강환).

- 자원봉사활동을 너무 조직화할 경우 자율성이 오히려 저해되고, 정부에 대한 의존심이 강해짐(영국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 중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고,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어서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는 부적합함.  
자원봉사자보호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시 사고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있고, 봉사자 포상도 필요함(윤석인).
- 비인가, 비공식 부문 인력 및 조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의 자원, 활동력,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공식화가 필요함(송경용).

### III. 주요사업계획

#### 1. 공적부조

- 영세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책토론회가 영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세민 주거문제와 고용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송경용).
-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할 필요.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공식과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정무권, 경실연).

#### 2. 사회복지서비스

##### 2-1. 노인복지

- 기본정책방향에서 노인의 가족부양에 대한 철학이 빠져있음.

- 소득보장 급여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하고 있는 것을 상향조정할 필요. 최소한 영세민을 위한 아동보육비 지원과 같은 정도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노령수당을 저소득층 노인가족에게 확대하고, 노인취업 알선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시키는 장기계획이 요구됨.
-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조사를 통해 도단위의 체계적인 시설설립이 필요함.
- 무의탁 단독세대를 위한 그룹홈, 주택 필요.
- 재가복지를 위해 가정봉사원과 주간보호시설이 연계 혹은 통합되어야 함(조기동).

## 2-2. 장애인복지

- 대상자 정리 필요, 현재 장애종류별로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준을 재활잠재력으로 변화시켜야 함. 예를 들면 시력장애인은 재활가능성 측면에서는 중증이 아님.
-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할 필요. 예를 들면 CBR을 통해 본인, 가족,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민간 자원의 동원을 통해서 공공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할 필요있음.
-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 지방의 자폐인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념 도입 필요.
- 장애인 관련부처가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한 통합조정기능 필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 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대 필요(전봉윤).



### 2-3. 아동복지

- 입양문제는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해외입양을 억제하는 정도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음(조강환).
- 아동유기죄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이 강화되어야 함(대구사회복지협의회).

### 2-4. 부녀복지

- 부녀복지라는 용어를 여성복지로 전환할 필요.
- 여성복지시설을 2000년까지 1개소씩 신설한다는 것은 전체 복지체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전체적인 방향, 수요, 문제점, 강화되어야 할 것과 유지되어야 할 것을 정리할 필요.
- 여성단체지원에 대해서도 재고 필요. 부녀지도사업은 2,002년까지 폐지 예정이며, 이미 새로운 사업을 건의한 바 있음(박정은).
- 모자가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부자가정의 문제도 심각, 이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필요함(김만두).

## IV. 예산투자계획

-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사회 건설의지, 실천의지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임.  
현재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의지수준으로 미루어볼 때, 2000년에 GNP 대비 1.5%라는 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가짐(오익환).

-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불 수준인 국가 중 사회복지예산이 GNP 대비 0.9% 수준인 국가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있음(김만두).
- 예산투자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재검토되어야 함(강원도 보사행정국장).

### <기타>

- 모든 사회정책 수립과정에 복지정책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 예를 들면 재개발정책 입안시 복지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함. 비정부기구(NGO)와 정부가 정책협의과정에서부터 밀접한 협의과정을 가져야 함(송경용).
- 정책토론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영역별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봄(정무권, 경실연).